

어긋난 文의 ‘한반도 평화 구상’… 북미 관계부터 파열음

연이은 북한 무력도발에 관계 악화
美 바이든 정부, 독자적 제재 예고
文, 대화 의지… 평화 노력 이어갈 듯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독자적인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핵심인 북미 관계 정상화부터 어그러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6·25 전쟁 당사국(한국, 미국, 북한, 중국) 간 종전선언 추진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려 했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이라고 말한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 종료’를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프란시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도 “교황님께서 기회가 돼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6박 8일간의 순방을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두바이로 향하는 공군1호기 회의실에서 수행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뉴스

반도 평화에 있어 역할을 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당시 교황은 문 대통령 요청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당시 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같은 해 12월 호주에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노력에 강한 지지와 함께 지속적인 협력도 끌어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첫 단계인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문 대통령은 미국·중국과 협상을 이어가는 노력을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은 미국과 종전

선언 문구 조율을 해왔고, 중국으로부터 ‘지지’도 끌어냈다.

하지만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요청에도 종전선언 구상에 호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초부터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강행으로 사실상 대회를 거부하는 모습이었다. 모두 세 차례(1월 5일, 11일, 14일)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북한은 ‘신형무기개발사업’ 차원의 행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6일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해 “국가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정정당당한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한 세력을 경계한 것은 아니며, 그로 하여 주변 나라들의 안전에 위해를 끼친 것도 전혀 없다”며 미국에서 예고한 대북 독자 제재를 겨냥해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연이은 무력도발로 북미 관계가 악화하면서 문재인 정부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북

한이 대화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고자 한 문 대통령 구상도 포기한 모습이다.

베이징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 및 남북관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희망했지만,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 북한도 ‘불참’을 공식화하면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현재 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관례를 참고해 적절한 대표단이 파견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취재진에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이 북한 무력도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대화 의지는 놓지 않고 있어, 임기 말까지 한반도 평화 관련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연이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북 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李 “日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 원천봉쇄”

“과잉 대응이라 해도 강력 대처”
韓日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걸림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는 과잉 대응이라 평가받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통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이 생략된 일본의 방출 계획은 과거사, 영토 문제에 이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도 큰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후보는 “무엇보다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우리의 해양 생태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조업 활동 피해, 수산물 안전 등 심각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강원도 18개 시군 번영회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일방적인 방출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와 수산물 안전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 강화와 국제기준 안전관리체

도인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원천 봉쇄하는 등 수산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겠다”며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도 0.01mg/kg 이하일 때만 수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방사능 검사 장비·인력 등 안전 관리 인프라의 대폭 확대도 밝히며 “노후 위판장 현대화에 맞춰 방사능 검사 장비, 실험실 등에 대한 투자를 함께 늘려 가겠다”고 제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가 방사능을 비롯한 다양한 위해요소의 사전 차단 효과와 더불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수산물 소비 촉진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의 기자 pathfinder@

‘가족 리스크 발목’尹… 이회창 전철 봄나

이회창, 자녀 이슈에 지지율 타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에 입문한 이후 ‘가족 리스크’에 발목 잡히면서 이회창 전 국무총리의 전철을 봄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 정치인은 대선 출마 이후 가족 관련 문제가 터지며 직업인으로서 쌓아온 가치가 훼손됐고 곧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회창 전 총리는 중앙선관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 정부 요직을 거치며 지난 15대 대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선출돼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다만 이 전 총리는 두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으로 ‘대쪽 판사’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측은 이전 총리의 두 아들이 최초에는 병역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연기 신청 후 수년이 지나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선 체중 미달로 면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최종 무혐의가 났으나, 이른바 ‘병풍(兵風)’이 몰아치면서 이전 총리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이 전 총리의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병역 의혹에 위법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대응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 대선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이인제 후보는 후보교체를 주장하다 탈당하고 국민신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결국, 15대 대선 투표 결과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40.27%, 이회창 전 총리가 38.74%, 이인제 국민신당 후보가 19.20%를 기록하며 대선 사상 최소 표 차로 이 전 총리는 낙선했다.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20대 대선에 도전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울산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했다.

한 검찰총장에 오른 뒤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수사 등을 지휘했다.

윤 후보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경력과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웠던 일화가 조명되면서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올랐고, 정권교체론을 등에 업으며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윤 후보도 정치 출마와 동시에 가족 리스크가 터져 나왔다. 지난해 6월 29일 정치 출마 선언을 한 뒤 장모 최모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지난해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는 학·경력 부풀리기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지난해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는 학·경력 부풀리기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지난해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는 학·경력 부풀리기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지난해

윤석열 “도심철도·고속도로 지하화… 지상에 편의시설”

수도권 교통 공약 발표 기자회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에 수도권 도심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한 뒤 지상에 주거·상업·문화·생태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수도권 교통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상 내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고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철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경부선의 경기 군포 당정

역에서 서울역 구간(32km), 경인선의 구로역~인천역(27km) 구간, 경원선 청량리역~도봉산역 구간(13.5km)을 지하화 대상으로 꼽았다. 지하화로 생기는 유류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서울의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경부고속도로 한남 IC에서 양재 IC 구간(6.8km)의 지하화 추진안도 제시했다.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양재~한남 IC 구간을 지하화하면 기존 노면과 완충녹지 등을 합쳐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인 60만m²의 공원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상 공원에는 각종 문화 시설이 들어서고 단절된 강남을 하나로 잇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기존 신분당선 서울지역 연장사업이 신사역에서 용산역까지 돈 있는 것을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잇고 은평뉴타운을 거쳐 삼송역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개발 공약 이외에도 “서울 여의도 금융타운을 금융특구로 지정해 서 글로벌 금융 체계가 정착되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을 고려해서 아시아 상품거래소를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